

대한민국 2017년 인권보고서

개요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관측자들은 2016년 5월에 치러진 대선과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간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에 실시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민 당국은 보안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인권 현안들로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 등의 관련 법률들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 부패, 가정폭력, 동성애자 군인 처벌 등이 있었으나 새 정부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중단했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책이 허용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제 1 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과 여타 불법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신병 사망률과 자살률 증가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개선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방부는 직전 3년간 사망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자살의 주된 원인은 괴롭힘, 가혹행위, 군대 부적응으로 알려졌다.

b.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하거나 정부 당국을 대리하여 행해진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고문을 주장하는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있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국방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나 일반 국민들은 괴롭힘이 군대 내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제 1.a 절 참조).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병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가혹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통계를 입수하기가 어려웠으며 가혹행위는 미묘한 문제이므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8월에 4성 장군과 그의 아내가 공관병에게 잡무를 지시하고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면서 욕설과 신체적 가혹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당사자인 장군은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9월에 체포됐다.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하의 인권담당관들은 2014년부터 당해 연도 7월까지 약 540건의 인권 증진 제안을 접수했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6년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했다.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매년 약 600명의 인권교관을 교육했다. 1월에 국방부는 민간인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와 관련하여 인권 문제가 제기된 중요한 보고는 없었다.

60개 항공사 회원들로 구성된 항공사운영위원회는 재원과 인력을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 내에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를 포함하여 국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위한 ‘출국대기실’을 설치했다. 출국대기실 운영 권한은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자는 변호인을 접촉하거나 입국 불허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1~6월에 하루 평균 132명이 이곳을 이용했으며 49 퍼센트가 당일, 97 퍼센트가 4일 이내에 출국했다. 출국대기실의 1일 수용 가능 인원은 약 60명이었다.

법무부는 출국대기실에 남녀가 구분된 대기실, 침실, 샤워실이 갖춰진 화장실 외에 텔레비전, 무료 와이파이, 소파, 공중전화, 정수기, 담요가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는 특히 수개월 동안 장기 수용되는 대기자들의 경우 출국대기실의 생활 환경이—사생활 보장, 침대,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기자들은 개별 항공사에 식사를 의존하고 있었다. 일부 대기자는 하루 세 끼를 패스트푸드만으로 해결했으며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여 다른 대기자나 난민 변호인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 현황: 교도소 및 구치소 시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교도소 내 사망자들의 사망률/사망원인은 국가 평균과 전반적으로 합치했다.

독립적인 감시: 교도소 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신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 요건을 준수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된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을 위협하고 구금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경찰 및 보안기관의 역할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 경찰청은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및 국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문민 정부는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가정보원(NIS)은 국가 안보 및 체제 전복과 관련된 범죄나 범행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의 포괄적인 권한과 비밀주의가 부실한 감독 체계와 맞물리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불합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당해 연도 중에 보안 기관이 관련된 면책 조치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일부 비정부기구와 노동자 권리 보호 단체들은 사복 경찰을 투입하여 시위를 관리하고 시위에 투입되는 제복 경찰의 명찰을 제거한 조치 뿐만 아니라 살수차 등의 물리적 진압 방식을 동원한 경우 특히 면책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자진 출두한 자를 경찰서에서 6 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구속 후 20 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금을 10 일 연장할 수 있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자의적 체포: 법무부는 1~9 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 명이 구속됐다고 보고했다. 7 명은 전원이 기소되어 1 명은 유죄가 확정됐으며 나머지 6 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정부기구들은 사회주의 운동에 관련된 도서를 파일 형태로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이진영의 사례를 지적했다. 유포된 도서에는 북한에서 발간된 소설과 주체사상에 관한 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진영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사회주의 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진영을 석방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구금자의 구속적부심 청구권: 형사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존중했다.

재판 절차

헌법은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필요한 경우 통역을 이용하고 구속 이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변호사 접견권(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정 출석권, 항소권 등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소급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보장되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피의자는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판사는 본인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법적 효력을 갖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 신청을 필요로 한다.

판사는 검찰과 피고 양측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진술하거나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신념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정의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사 사법 절차 및 구제 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 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들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과 단체는 국내 인권 기관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잘못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사법적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개월 간격으로 주요활동사항, 여행계획,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드물었으며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이다.

국회의원과 비정부기구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감청 및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구체적으로 권한 남용을 주장한 사례나 진정이 제기된 사건은 없었다.

제 2 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헌법 제 21 조 제 4 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선거법,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가했다.

표현의 자유: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에 입각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도 북한을 고무 혹은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정치인을 비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당국에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장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6/17 년도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시민을 위협하고 수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기술했다(1.d.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에 수록된 이진영 사건 참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간주하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지만 엄격한 명예훼손 법률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한됐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비정부기구 국경 없는 기자회는 공익에 부합하고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겨냥한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처벌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9월에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언론인 3천 명 이상이 독립적인 편집권 침해와 경영진의 보도 통제에 항의하여 파업을 단행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지지 의사를 밝힌 이 파업은 연말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16년 7월에 공영방송 이사회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하고 경고 차원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징계나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뉴스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일련의 행위들을 규탄했다.

검열 혹은 내용 제한: 여성가족부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심의할 수 있으며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금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방송과 인터넷 통신의 윤리 규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했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부와 공직 인사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동시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은 사실적 정보를 드러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는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7월에 기소됐다. 12월에 이유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안보: 국가보안법은 복한을 지지하거나 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을 체포하고 수감하거나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정당을 해산하는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2015년에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로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감시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널리 보급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게시판 같은 SNS에 게시된 글에 불법·유해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금지된 게시물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한이 있다. 금지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될 수 있다. 그에 추가하여, 서울중앙지검 전담반은 인터넷상에서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발견되는 즉시 삭제 조치했다.

정부는 폭력 사이트, 외설 사이트, 도박 사이트, 기타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식품·의약품 불법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자살 모의·조장 행위가 포함된다.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와 북한 유튜브 채널 및 트위터 계정으로의 직접 접근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지만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국보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된다.

포털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재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에 대해 2012 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 3 절 참조).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과 언론이 ‘부분적으로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면, 2016 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93 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언론은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가수와 배우가 열거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2008 년 2 월부터 2017 년 3 월까지 정치 음해 공작과 반정부 문화계 인사 퇴출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2017 년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최순실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조사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판 세력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2 월에 특검은 약 1 만 명의 예술가, 작가, 영화인, 가수, 배우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기소했다. 언론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강제로 퇴직했다고 보도했다. 10 월에 법원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각각 징역 3 년과 2 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으며 상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에 추가하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징역 1 년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입각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를 금지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2 건 이상의 집회가 신고됐다는 이유로 상반기에만 37 건의 집회를 금지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기업들이 친사용자 성향의 ‘항색’ 노조를 동원하여 사전에 집회를 신고함으로써 다른 단체들이 회사 건물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7 월까지 접수된 38,624 건의 집회 신청 가운데 47 건이 불허되거나 조건부로 제한됐다고 보고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형법 제 314 조(업무방해)가 평화로운 집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관측자들은 경찰이 대규모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술과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례로, 2015 년 11 월 민중총궐기(제 7.a 절 참조)에서는 수백 대의 버스를 범퍼가 맞닿도록 밀착시켜 도로에 차벽을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과격함 폭력이 발생했다. 시위대는 차벽을 부수고 통과하거나 전복시키려고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9 월에는 2015 년 11 월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차를 조종하여 백남기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경찰관 2 명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하고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에 앞서 경찰청장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나 유족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은 이를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책임자였던 전 경찰청장 2 명 역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령의 시위 참가자였던 백남기는 수개월 동안 혼수상태였으며 2016 년 9 월에 사망했다. 10 월에 검찰은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백남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장과 경찰 3 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연말 현재 진행 중이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청이 신청한 부검 영장은 유족의 반대로 철회됐다.

경찰청은 5 월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위 장소에 차벽과 살수차를 동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8월에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백남기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2009년 이래로 의혹이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했다.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

d. 이동의 자유

국내 이동의 자유, 국외 여행(북한 제외), 이민, 송환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HCR)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주자, 난민, 무국적자에 대한 가혹행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에 의하면 탈북자의 약 70 퍼센트는 여성이며 이들은 상당수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경험했다. 최근 탈북자들은 OHCHR 과의 면담에서 그러한 범죄가 탈북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했다고 응답했다(국무부에서 발간한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보고서」 참조).

국외 여행: 방북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방북 희망자는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난민 보호

강제송환: 법률은 강제적인 송환을 금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UNHCR에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망명에 대한 접근성: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별도의 법률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난민 또는 망명 통계에 탈북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 의해 한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탈북자 혹은 해외 난민을 수용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했다.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입국 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건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난민신청자는 정부를 상대로 통역과 법률적 조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에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9월 현재 6,449명이 망명을 신청했는데 이는 2016년 10월의 6,041건보다 증가한 수치였다.

한국은 1994년 이래로 전체 신청자의 약 3퍼센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상당수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인력 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난민 및 망명 제도의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현재 전국 10개 사무소에 24명의 심사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다.

안전한 출신국가/경유국: 법률은 입국장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박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출신국가나 안전한 제3국”으로부터 온 경우가 포함된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문화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수의 북한 출신 이주민들과 타국의 망명 신청자들은 사회적 차별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까지 망명 신청자에 대한 1건의 차별사례가 있었고 탈북자와 관련된 공식 차별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항구적 해결책: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무부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버마 출신 카렌족 난민 30명을 항구적으로 재정착시켰다. 이 사업은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외국인 난민 재정착 제도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습, 사회·문화 적응 교육, 직무·학업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미래를 고려하고 있다.

임시 보호: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경우 임시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문이나 문제가 많은 취급 혹은 형벌로 인해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자에게는 ‘인도적 체류 지위’에 근거한 대체 보호 수단으로서 갱신이 가능한 단기 체류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1994년 이후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18,854명 가운데 955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됐다. 해당 연도 말에 약 4,750건의 신청이 심사를 받고 있었다. 관련 규정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

지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난민과에 따르면 2013 년 이후로 난민 신청이 300 퍼센트 가까이 급증한 까닭에 신청 처리에 평균 16 개월이 소요되고 있었다. 정부는 난민 신청이나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망명 희망자가 최장 6 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통상적인 난민 지위 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시리아 국적자에게 인도적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한국에서 인도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시리아 국적자였다.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이집트, 중국 그리고 버마 난민이 포함됐다.

무국적자

법무부는 9 월 당시 171 명의 무국적자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그 중 상당수는 귀화한 후에도 외국 국적을 유지한 경우였다. 한국의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한국 국적을 상실하며 기존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국적 상태로 남게 된다. 일부는 무국적자의 여행 서류를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우였으며, 귀화자가 결혼 사기나 서류 위조 혐의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무국적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서 탈북자의 자녀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불법체류자거나 무국적자 신분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중국 국적과 탈북자 지위를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결국에는 국적을 취득하고 탈북자 대상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식 탈북자에게 부여되는 금전적 지원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 탈북자는 무국적자 자녀를 중국에 남겨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가혹행위와 착취에 특히 취약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 송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관공서나 자국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비정부기구의 한 관측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한 2,000~3,000 명의 무국적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신고 및/또는 무국적 아동은 교육 혜택을 받았다.

제 3 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법률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치뤄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6 월에 설치된 국가정보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권한 남용,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관측자들은 2016년에 치러진 총선과 5월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예정된 12월보다 앞당겨서 실시됐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1.1 퍼센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1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참여연대 사무총장 안진걸에게 벌금 300만원(2,585달러)을 선고했다. 법원은 21명의 다른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도 50~300만원(431~2,585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최악의 후보 10인’을 온라인에 게재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죄목이었다. 연말 현재 항소가 제기된 상태였다.

대선 기간 중에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집권 여당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민단체들이 ‘촛불’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당과 정치 참여: 개인이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운동 기간 중 관련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보 교환 그리고 선거운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여성이나 소수자의 투표, 공직 선거 출마, 선거 감시, 기타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 4 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법률은 공직자 부패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간혹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당해 연도 중에 다수의 공직자 부패 사건이 보고됐다.

부패: 연말 현재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였으며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3월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게 탄핵을 선고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으며 형사 소추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박근혜는 자신의 오랜 지인이자 최측근인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최순실 소유의 비영리재단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8 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5 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법원은 1 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재용은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산 공개: 선출직을 포함한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재산 공개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8,613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5 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다소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부 대형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산별 노조는 정부가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판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제 3 절 ‘선거 및 정치 참여’ 및 제 7.a 절 참조).

정부 인권기구: 헌법에 열거된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일선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인력이 부족하며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7 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5,498 건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으며 4,563 건이 처리되었다.

옴부즈맨 업무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등 여러 정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정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 6 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강간과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된 사건에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제도는 효과적으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가정폭력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었다.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약 50 퍼센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강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하 3 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강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한 사례들도 있었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이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가해자를 상대로 최장 6 개월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명령은 최장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 만원(6,03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보호명령에 불응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17,23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 지정 교정 치료 및 상담을 명령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명령에 의해 가해자의 주거 퇴거, 피해자의 100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통신 장비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행위를 금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 년도 통계(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45.6 퍼센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수치는 이보다 높은 53.3 퍼센트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8 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폭력 핫라인 전화로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2014 년 동기간에 비해 2015 년에 15.6 퍼센트 증가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동거인의 폭력 신고 건수는 31.7 퍼센트 증가했다.

7 월 경 한 남성이 트럭을 몰고 서울 도심까지 여자친구를 추격하여 주먹과 발로 구타하는 영상이 유포되자 경찰은 여성 폭력 근절 100 일 계획을 추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백주 대낮에 도심에서 폭력을 휘두른 이 사건이 극단적이긴 하나 예외적인 학대사건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남성 2,0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 퍼센트가 여자친구를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가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으로 전국 38 개 통합지원센터와 104 개 소규모 상담소에 재원을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및 치료, 사건 조사,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법률은 판사 또는 법무부 심의위원회가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해 연도 상반기에 14 건의 화학적 거세가 실시되었다.

2015 년 한일 ‘위안부’(성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된 여성) 합의는 국내외 시민단체와 생존자 모임에서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다. 7 월에 강경화 외교부장은 민간 태스크포스에 2015 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독립적인 기구인 이 태스크포스에서 12 월 27 일에 발간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 보고서는 2015 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과 협상 절차에 우려를 제기했으며 특히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적절한 노력’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희롱: 관련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고,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제 7.d 절 참조). 경찰청은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연도에 다수의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강압적 산아 제한: 강압적 낙태, 비자발적 불임 시술, 기타 강압적 산아 제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모성사망률과 피임 보급률 추정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monitoring/maternal-mortality-2015/en/>

차별: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OECD 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15 년의 경우 남녀간 급여 차이는 37.2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제 7.d 절 참조).

아동

출생신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태아가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률은 모든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생 후 1 주일 이내에는 입양을 금하고 있다.

아동 학대: 법률은 아동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 년에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아동 학대 사례가 2015 년 대비 59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계도 캠페인의 시행과 신고 요건의 강화가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 60 개 아동 보호 시설과 63 개 쉼터를 운영했으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정부는 아동 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24 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수 건의 중대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조혼 및 강제결혼: 법률상의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18 세이다. 강제결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동 성착취: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13 세이다. 19 세 미만의 청소년과 위계·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아동은 온라인이나 가출 소녀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매매와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하다.

13 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10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13~19 세 미성년자 강간죄는 5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에 추가하여,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금지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2 천만원(17,23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아동유괴: 한국은 ‘1980 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다. 국무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납치에 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travel.state.gov/content/childabduction/en/legal/compliance.html) 참조.

반유대주의

소수의 유태계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장애인

법률은 신체, 감각, 지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 조사 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전담하는 검·경 특별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시행했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다수의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법률은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25,840 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및 개인 소유 건물과 시설의 장애인 친화적 접근을

권장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장애인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개 권역별 재활병원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를 운영했다.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저소득 가구 경증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며 3~17세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립특수학교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종종 장애 아동은 입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공·사립 학교, 어린이집,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을 위한 설비와 기타 자원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국민 대부분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약 5,090만명의 한국에는 11월을 기준으로 210만명(25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종합적인 차별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적으로 행해지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강제 송환에 관한 사안들이었다고 보고했다.

일부 이민 가정의 아동들이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적 자원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인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역시 외모로 인한 따돌림을 경험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 차별 및 기타 가혹행위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원칙이 성소수자(LGBTI)에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러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군 형법의 ‘추행’ 조항은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경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5월에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다른 병사와 합의에 의한 동성애 관계를 맺은 장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장교는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40~50명의 병사 중 한 명이었다.

LGBTI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거나 차별 혹은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반기에 그러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이 2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HIV 및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관측자들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 7 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법률은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합법적인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2015년에 대법원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률은 노조 지도자가 노조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자체적인 운영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 또는 공직 선거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등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또한 해당 노조의 입장 표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해직 교사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률은 특히 ‘필수공익사업’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 통신, 수도, 기타 공익사업, 병원 등과 같은 사업을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규정된다. 법률에 의해 필수공익사업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의 50 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사측에서 노조와 협의하여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지정한 인원은 쟁의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은 일부 특수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법률에 의해 파업이 금지된다.

법률은 ‘노동쟁의’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축소나 정리해고 같은 경영권에 관련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해관계자들은 파업 절차가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다. 노조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교섭 참가자에 대한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법한 파업을 포함한)단체행동권과 관련된 법률을 전반적으로 시행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추가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명령을 무시하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노조의 합법적인 교섭 요구를 거절 혹은 무시한 사업주를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파업을 억제할 목적으로 형사 처벌을 비롯한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 등 과도하게 광범위한 형사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5월에 대법원 2부는 주로 업무방해와 관련된 6개 혐의로 2016년 7월에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그의 혐의는 경찰 76명 부상, 경찰 3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경찰 버스 43대와 찢어진 제복 및 조끼를 포함한 장비 138점의 파손을 초래한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한 행위로부터 기인했다. 한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430달러)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444달러)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비정부기구와 노동계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노조 집회를 주도한 죄목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은 한 위원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래 집회 주도자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량”이라고 보도했다. 2016년 1월에 방한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갈수록 퇴행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6년 6월 보고서에서 사용자에 의한 반노조 행위의 예로 사용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노조의 결성, 조합원에 대한 감시, 위협, 부당한 압력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노조 와해 시도,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위장 하도급계약과 조합원 해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자 및 조합원 해고, 노조 지도자의 의욕을 꺾기 위한 한직 발령 등을 들었다. 특별보고관은 사용자가 노조의 권리를 잠식하는 방법을 자문받기 위해 노무법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가 건설부문 근로자에게 노조 선택을 강요하거나 완성차업체가 노조 가입 근로자를 차별한 사례 등 당해 연도 중에 보고된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2016년 9월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약 1,200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설립이 허가된 첫 해에 조직 캠페인과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송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노조 활동 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있으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강제노동에 적용되는 형량은 다른 중범죄의 형량과 비례했으며 정부는 그러한 형량이 강제노동을 예방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기만적인 채용 관행, 불법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여권을 빼앗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드물다’고 보고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 센터는 불법으로 여권을 빼앗는 행위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여권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여권을 빼앗는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의 2015/16 년도 보고서는 고용허가제(EPS)하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착취나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제 7.d 절 참조)이 강제노역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은 외국인근로자 사망 원인 1 위가 자살이었으며 산업재해, 질병, 교통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하면, 2007년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래로 네팔 근로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숫자에는 2015년에 자살한 9명, 2016년에 자살한 7명, 2017년 8월까지 자살한 5명이 포함되어 있다. 자살의 이유는 우울증, 과로, 임금 체불 등이었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 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다. 중학교까지(약 15 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 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리적 혹은 건강상의 관점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업종의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18 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한다. 단속과 처벌로 법률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었다. 정부는 당해 연도 11 월까지 2 건의 아동 노동 위반 사건을 보고했다.

아동이 상업적 성착취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제 6 절 ‘아동’ 참조).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헌법과 법률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한다. 법률은 성별이나 종교 혹은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생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연령, 신체 조건, 출신지역, 학력, 혼인 여부, 임신, 국적, 병력에 근거한 고용상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피부색, 정치적 성향, 언어, 에이즈 또는 기타 전염성 질환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하는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률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조항들을 강제로 집행하는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HIV/AIDS 보균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차별이 행해졌다.

채용 시와 고용 기간 중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됐다. 남녀간 임금 격차가 유지됐으며 여성 근로자의 상당 비율이 저임금 비숙련 계약직에 종사했다. 여성은 출산 후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7 월을 기준으로 국내 500 대 기업 10 곳 중 7 곳은 여성 임원이 1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 설치된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2015 년에 536 건이던 성희롱 건수가 2016 년에는 1,038 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고 8 월 25 일 발표했다.

법률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4 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 장애를 지닌 상당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근무시간 조정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16 년 5 월 현재 15~64 세 장애인 136 만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외국인근로자는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면해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최장 체재 가능 기간은 4 년 10 개월로 이는 영주권 신청에 요구되는 5 년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이다. 일부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규정이 외국인근로자의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자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5/16 년도 보고서는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착취나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제 7.b 절 및 제 7.e 절 참조).

법률은 비공식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급여 수준이 정규직보다 낮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2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파견 근로자”로 불리는) 하청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 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형태를 근거로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와 현지 언론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했다(제 7.e 절 참조).

e. 최저 근로 조건

7 월에 정부는 2018 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 원(6.49 달러)으로 16.4 퍼센트 인상했으며 이는 20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 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은 4 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

법률은 2 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8 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특정한 주에 40 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주휴(週休)’로도

불리는 주 1 일 휴가 규정 등의 근로 기준이 면제된다. 법률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의 주간 시간외 근무시간을 12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직업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법률에 의해 근로자는 고용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기준은 농업, 어업, 광업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정부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및 용인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시간외 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역과 벌금을 포함하는 처벌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은 위반을 예방하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2015 년부터 2016 년 사이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가 25 퍼센트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예방적으로,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 년 하반기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사업장의 86.8 퍼센트에서 위반을 적발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며 불시 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사고 예방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일련의 규정들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그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이 노동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계약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전자·자동차·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다수의 이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직장을 잃은 경우 3 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3 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당국은 해당자의 취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또는 건설 근로자 같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주노동자는 전직을 원하는 경우 구인 기업의 명단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전직이 어렵다. 사업주는 구직 근로자의 명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원하는 근로자에게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최장 4 년 10 개월 동안 체류한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3 개월 후에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규정 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취업 전 교육을, 전직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적응 교육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5 개 언어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프로그램, 쉼터, 무상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콜센터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42 곳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무료 법률 자문, 상담, 통역, 자국어 건강검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개설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에게 원스톱 서비스(이민, 복지, 교육 서비스 등)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곳을 설치했다.

법률은 1 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근로자는 은행 규정과 비협조적인 사용자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출국하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인 농업, 축산업, 어업 부문의 경우 법률이 근무시간, 공휴일, 수당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다른 비정부기구들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라는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임금에서 주거비나 식대를 차감 당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계약 변경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분기별로 사망자수와 질병자수에 관한 산업재해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9 월 현재 67,651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512 명이었다고 보고했다. 5 월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6 명이 목숨을 잃고 20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